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 2026년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인구 감소, 산업 침체 등 성장 정체지역에 민·관 합동 지원단이 맞춤형 상권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전략 제시
- 전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 (참고3)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둘째, 민·관 합동 지원단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고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에 직결되도록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도출된 우수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당 특구를 향후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여 실효성 있는 성장을 견인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30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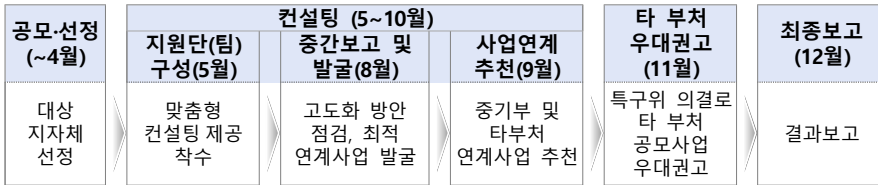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박보근	(044-204-7590)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5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규제혁신사업팀	책임자	주무관	고은비	(044-204-7597)
		담당자	팀 장	김종화	(055-751-9903)
			부 장	박지연	(055-751-9403)

참고1

2026년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소멸위기 지역의 특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규제특례-재정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 성장거점 육성
- (지원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지자체(총 135개, '26.3월 기준)
 - ※ (타겟팅 전략) 인구감소지역(가점 10점) 및 관심지역(가점 5점) 등 소멸위기·비수도권 지역을 집중 우대하여 국가 균형발전(지방시대) 국정 철학 뒷받침
- (지원규모) 10개 지자체(총 1.5억원, 개소당 15백만원 규모)
- (지원방식) 민·관 합동 지원단*이 ①자료 분석, ②현장 실사, ③특화사업자(지자체·민간 등)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컨설팅 수행
 - * 지자체+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지방중기청+중진공 등

□ 추진절차



□ (지원내용) 특구 체질 개선부터 재정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① 심층 진단 (현장 분석)	• 기존 특화사업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 • 주요 성장저해요인(앵커기업 부재, 길러 콘텐츠 부족 등), 규제 애로 식별
② 전략 수립 (BM 기획)	• 민간 기획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 민간 주도 상권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 기획
③ 연계·추천 (재정 매칭)	• 도출된 우수 로드맵을 중기부 지자체 대상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천 * 지역상권 육성,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
④ 우대 권고 (범부처 협력)	• 타 부처 공모사업* 우대권고(특구위원회 의결)를 통한 특구 활성화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림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문화도시 조성(문체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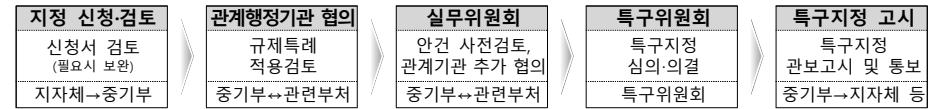
참고2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현재 171개 특구*(135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5.11.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30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9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특구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	6	5	2	3	1	4	19	13	16	16	12	29	20	13	2	171

참고3**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 (인구감소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시(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18개)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